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오현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oh@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임.
 - EU는 18조 3천억 달러의 GDP와 5억의 인구를 갖춘 최대의 시장이며, 한국의 제2무역국(2007년 기준)으로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
 - 한·EU FTA의 발효는 거대 무역국과의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전략적·다원적 FTA 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기체결 FTA 중에서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 한·EU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임.
-
- 한·EU FTA 발효 시점에 시행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첫째는 한·EU FTA로 인해 한국과 EU의 무역투자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조명함.
 - 두 번째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한·EU 간의 중요한 통상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망함.
 - FTA를 통해 양국 간의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무역왜곡적 정책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갈등요인이 존재함.
 - 세 번째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EU의 비관세 장벽 철폐 압력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EU는 전통적으로 높은 역내 무역·투자 비중이 특징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 2010년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특히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기존 EU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5조 8,706억 유로 규모로 GDP 대비 약 50%에 이룸.
 - EU의 역내투자 역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규모가 큰 회원국들에 집중되어 있음.
- 상품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거대경제권인 EU는 세계 전체 무역의 39.5%를 차지하고 있음.
 -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EU의 대외무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음.
 - EU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및 자동차’이나 주요 수입품목은 ‘에너지’임.
-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도 상이함.
 - 2004~07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

- 투자관계도 이를 반영하여 변화를 겪음.
 -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EU 가입을 전후하여 사업환경 개선, 수출시장 확대, 외자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 EU는 거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지역, ② 중·동구 유럽내의 성장중심 지역, ③ 중·동구 유럽 내의 낙후지역 등 세 분류로 구분 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U가 FTA를 확대하려는 데에는 EU의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자각과 함께 신흥경제권의 성장, 관세장벽이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에 기인함.
- 한편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 통상정책의 범위와 결정절차, 기관간 권한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통상정책 중 투자부문이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되면서 회원국이 체결한 기존의 양자투자협정과 앞으로 추진될 FTA와의 통합 또는 양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

■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2010~15년 기간의 통상정책안을 발표함.

-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적인 FTA를 계속 추진, 둘째,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규제 부문의 수렴·협력 추구를 강화, 셋째, 선진국 및 신흥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EU 기업들의 접근성 개선에 주력,

넷째, 새로운 해외투자정책의 수립을 명시, 다섯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독 조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2006년부터 EU는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전략에 의거하여 역외국과의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 중인데, 2010~15년 기간의 신통상정책에서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임.
- 그러나 FTA 전략은 글로벌 유럽하에서의 포괄적 FTA 전략에서 상대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FTA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앞으로 EU의 통상정책은 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공격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EU는 기존의 글로벌 유럽 전략에 따른 FTA 정책을 유지하되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FTA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둘째로 지재권 보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서비스와 투자부문의 개방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는 GPA를 통한 개방 폭이 무역상대국보다 커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를 강화시킬 예정이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요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세 번째로 EU는 글로벌 규범 제정자(rule setter)로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무역국에 대한 규제압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상대국이 국제기준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검사, 인증제도를 강요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잡을 예정임.
- 마지막으로 EU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재권, 정부조달시장, 산업정책 등에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의 성장잠재력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중국의 지원 가능성 등

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통상마찰과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의 통상정책 체계가 변화함.

- 리스본 조약은 EU 대외정책의 법적 기반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통상정책을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무역상대국에 따라 통상정책 자체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음.

◦ EU의 공동통상정책은 향후 무역자유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정책의 목표에 명시된 인권,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리스본 조약은 EU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유럽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동의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EU의 무역 관련 내부법규 제정에 공동결정 절차가 적용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유럽议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음.

- 전통적으로 상품교역 부문의 무역협상(관세인하)은 EU 공동체의 소관이었으나, 서비스와 지적권 부문은 EU 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공동부문으로 간주되어 왔음. 그러나 리스본 조약은 통상정책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영역을 서비스와 무역 측면의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 부문으로 확대시킴.

■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 발효는 양국간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나

관할 수단은 없는 상황임.

-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이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무역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FTA 발효 이후 수출경합도가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음.
-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함.
-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은 ‘품질대비 가격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 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함.
- 설문조사의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임.

3. 정책 제언

-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음.
 -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잠재적으로 세이프가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섬유, 가전, 자동차 부문인데,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대형자동차 부문에서 향후 대EU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EU의 자동차 산업이 장기침체를 겪을 경우에는 발동 가능성이 다소 존재함.
 -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사후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함.
 - 개성공단 및 북한 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북한 지역의 역외가공지역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 부여가 허용될 것임.
- 앞으로 한·EU 간에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첫째,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술규제를 이해하고 EU 수출을 염두에 둘 경우 생산계획단계에서부터 EU의 해당 기술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능한 한 사전에 인증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
-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음.
 - 기획-생산-마케팅-유통 등 생산라인의 전 단계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품목은 다르나 유사한 생산라인을 거쳐야 하는 중소기업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한·EU FTA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EU 조달시장의 규모가 크므로 진출준비가 필요함.

-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함.
 - EU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09년 2조 2,884억 유로(EU GDP의 17%)에 달하며, 규모 면에서 2, 3위인 미국과 일본을 각각 2배와 4배씩 상회하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큰 정부조달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2009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5.7% 증가하여 2005년 이래 완만하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음.
- EU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음.
 - EU 공공조달시장의 대부분은 개별 회원국 공공기관의 발주가 대부분이며, TED에 등재되는 공고라 할지라도 결국 개별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필요함.
-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 조달기관은 구매제품의 수리, 교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으로 자국 내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를 보유한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업체 입장에서도 현지 지점이나 생산시설, 연락사무소를 갖출 경우 현지의 기업문화, 공공업무 방식, 정부운영계획 등 현지 정보 습득에 유리하며, 현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 있음.
- 중·동구 유럽 지자체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임.

-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

도록 해야 하며, 한국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자세와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 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한 공통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임.

◦ 현재 한국은 경제규모와 산업별 특화뿐만 아니라 발전수준 또한 상이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 또는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FTA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상이한 FTA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임.

-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빚을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음.

-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임.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음.

■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도 필요함.

-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킴.

◦ 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사회의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FTA로 인한 후생증가나 구조조정 비용이 모든 사회계층에 고르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균형적인 국토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